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전지수*

〈 목 차 〉

- I. 서론
- II. 대학 인권센터와 대학의 자율성의 관계
- III.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 검토
- IV. 결론

〈국문초록〉

2020년 제21대 국회 의안에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고, 11월 현재 교육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각 법률안은 동일하게 “학교는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을 가지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업무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 국립 군산대학교 인권센터·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법학박사.

분산되어 있던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로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한 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인권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해 보일 수 있겠으나,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 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상기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를 논증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언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인권, 인권센터, 대학의 자율성, 과잉금지원칙,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고등교육법

〈Abstract〉

Whether the mandate to establish a Human rights center is justified: Focusing on some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ZEN, Zi Soo**

The 21st legislative bill in 2020 mad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mandatory as a major

** Ph.D. of Laws, Human Rights Center, Kunsan National University.

issue. And as of November, the Board of Education has received and is undergoing evaluation. In common with the bill, "University ... establish a cent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embers and improve their rights.". We provide counseling, investigation, relief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ations targeting equal rights that all members such as learners, teachers, and employees receiving higher education at quarantine universities with publicity, and there are various discriminations.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center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embodying the dignity and values to embody individual func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at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revised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that "the human rights center must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the creation of these regulations, the purpose of protecting human rights may seem justifiable. However, since it does not conform to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s a resul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re is room to infringe on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guaranteed by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before a situation where human rights limit human rights arises, it is necessary to argue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center is justified centering on the partially amended legisl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o review alternatives to establish a human rights

center within the scope of guaranteeing university autonomy. This is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Key words: Human rights, Human rights center, autonomy of university,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suitability of means, minimum of infringement, balance of legal interests, Higher Education Law

I. 서론

유럽과 영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대학 내 인권센터는 조사·심의를 통한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선행사례로 인식된다. 우리 대학 내 인권센터는 2012년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설치한 이래,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 중에서 47개 대학으로,¹⁾ 동년 12월 기준으로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 대학으로 확산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²⁾ 그래서 2020년 제21대 국회 의안에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함) 2건이 발의되었고, 동년 11월에 교육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³⁾ 법률안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는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물론 공공성을 가지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습자뿐만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2019.03.27.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95, 2020.07.09., 1면.

3) ①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75, 2020.06.18.,

②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95, 2020.07.09.

4) 학계에서도 인권센터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영중,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내 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경찰법연

아니라 교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업무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 시정기능을 통합하여”,⁵⁾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법률로써 규정하면 인권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해 보일 수 있겠으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를 묵인할 수 없다. 즉, 대학 내 인권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설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법률로서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로 점철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을 앞세워 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를 논증하는 것은 긴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인식된다.⁶⁾ 이를 위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의 개념과 기능, 그 현황과 사립대학 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의 개념과 인권센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Ⅱ),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의 정당성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Ⅲ), 대학의 자율성과 입법목적에 내포된 상충하는 두 법익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인권센터를 설치 혹은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 제16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8.06, 271면 이하;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04, 220면 이하.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7651호 개정이유.

6) 국가작용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된다. 김선기, “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독립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0, 47면.

II. 대학 인권센터와 대학의 자율성의 관계

1. 인권센터의 의의

가. 대학 인권센터의 개념과 기능

인권기구란 “정부에 의해서, 헌법이나 법률, 명령에 의해 설립되고, 그 기능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인 기구”로 정의되고 있다.⁷⁾ 대학 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차별시정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통합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기능은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에 대하여는 현행법령 및 학계에서 정하거나 달리 논의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인권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각 대학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상담·조사·구제’라는 공통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⁸⁾ 해당 규정들의 목적조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5개 규정에서 모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공통되었고,⁹⁾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와¹⁰⁾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기 위하여”

7) Center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 Handbook i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1995. para. 36-39(박선옥,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346면 주17에서 재인용).

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되는 대학 인권센터 규정(① 「강릉원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② 「경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③ 「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④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⑤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⑥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⑦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9) 「경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조, 「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조,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조,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조.

10) 「강릉원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조.

라고 각기 규정하고 있다.¹¹⁾ 이렇듯 인권센터가 갖는 특수성과 대학 내 인권센터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인권센터의 개념을 정리하면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조사·구제 업무 등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

한편,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의 쟁송은 심판을 통해 ‘사법적 구제(judicial remedies)’를 하는 것과 달리 대학 인권센터는 사건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라는 점에서 구분된다.¹²⁾ 즉, 인권센터가 상담·조사·구제 업무 등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조사·구제, 정책 개발 및 자문·권고, 교육과 홍보 업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¹³⁾ 여기에서 상담·조사·구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신청 또는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을 받을 수 있다. 상담하는 내용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발생되어 관련 서류 일체는 비밀취급 정보로 분류된다.¹⁴⁾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출

11)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2조.

12) 홍성수, 앞의 논문, 205면.

13) 홍성수, 앞의 논문, 204-206면.

14)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통합한 행정자원관리 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공문은 비밀취급 정보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공문 비공개사유는 1호부터 8호까지 다음과 같이 나뉘고 있는데, 인권센터 공문의 경우 주로 1호, 4호, 5호 및 6호의 순으로 취급되고 있다. 참고로 ① 1호는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2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공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수사, 재판, 범죄예방 등의 관련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⑤ 5호는 감사, 감독,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⑥ 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⑦ 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조사가 개시되면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사 전에 헌법상 진술거부권부터 고지한다.¹⁵⁾ 조사가 완료되면 신고요지(피해주장사실과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및 참조 조문), 조사내용 및 결과(피신고인 인정 사실, 증인 및 참고인 인정사실, 관련 정보 열람 내용 등), 참고사항, 증거서류(진술서,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등)의 순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구제는 신고접수 후 지체 없이 진행되거나 인권위원회 심의·의결 후 진행하여 신고인이 소속된 부처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가령,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피해자보호의 일환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조치 하는 것과 달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인권위원회의 회의결과 의견 보고를 거쳐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징계위원회)에 권고조치를 하므로 구제의 시점은 각기 상이할 수 있다.

나. 인권센터 현황과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

전 세계적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심의·구제 기능과 관련된 연구와 사례는 한계가 있다.¹⁶⁾ 가령, 독일의 경우 포츠담 대학교 인권센터(Universität Potsdam Menschenrechtszentrum)는 인권연구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심의를 통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인권센터와는 상이함을 나타낸다.¹⁷⁾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인권센터(Human Rights Center)를 설치하여 전쟁 범죄와 기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⑧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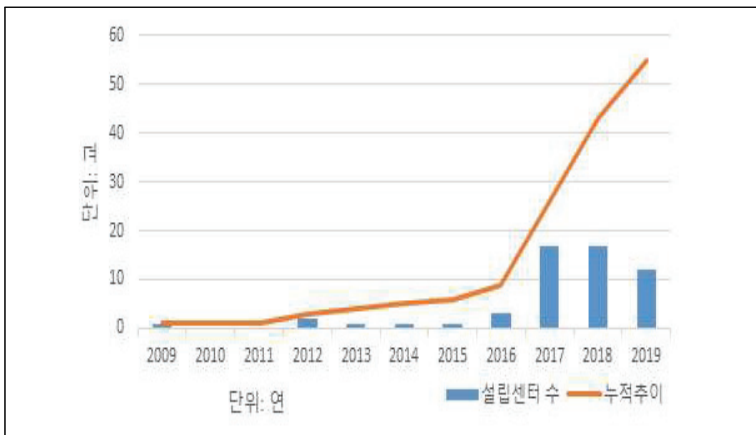
15) 즉,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관하여 고지한다.

16) 홍성수, 앞의 논문, 201면.

17)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연구”, 2020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 16-21면.

타 국제인도법 등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를 법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¹⁸⁾

인권센터는 2012년 06월 14일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과¹⁹⁾ 함께 동년 07월 12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이 제정된 것을 필두로 하여 2016년부터는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1>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 양상²⁰⁾

대학알리미 공시대상대학 2020년 공시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총 415개 학교 중에서 사립대학은 357학교로 전체 대비 86%의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낸다.²¹⁾ 공시대상대학의 설립별 근거는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18)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 <https://humanrights.berkeley.edu> (2020. 11. 14. 10:00 인출).

19) 특히, 「중앙대 인권센터 운영 규정」제2조에서는 인권센터를 “총장직속기구”로 규정하여 인권보장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선도적이다.

20) 백승민, “한국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0, 286면의 그림1 인용.

21)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2020. 12. 01. 18:48 인출).

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186학교), 산업대학(2학교), 교육대학(10학교), 전문대학(134학교), 방송통신대학(1학교), 사이버대학(19학교), 기술대학(1학교), 각종학교(2학교)와 동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42학교)으로 구분되며, 특히 총397개 학교 중 사립대학은 87.4%의 수치를 나타냈다. 후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른 한국폴리텍대학/ICT폴리텍대학(9학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1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국립대학보다 높은 수치(55.6%)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쟁점은 대학 인권센터는 충분한 예산과 인적 자원이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²²⁾ 즉,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과 설치하게 될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³⁾

2. 대학의 자율성의 의의

가. 대학의 자율성의 개념

대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갖는다.²⁴⁾ 헌법 제22조는

22) 홍성수, 앞의 논문, 218면.

2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7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재직 중인 대학 인권센터 구성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①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 확충’이 33명(3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② 인권센터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센터 인사 및 예산 충원과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이 60명(61.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40-41면).

24)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2. 10. 1. 92헌마 68 등, 판례집 4, 659-660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의 경우 “교수를 통한 진리탐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학에서의 과정으로, 제31조 제4항의 경우에는 “지식의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학문적 연구”로 구분되고 있다.²⁵⁾ 그리고 헌법 제22조의 해석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31조 제4항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²⁶⁾ “더 확실히 보장하고 제도화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생존권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²⁷⁾ 대학의 자유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를 그 본질”로 한다.²⁸⁾ 즉,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된다 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²⁹⁾ 따라서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조종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⁰⁾ 특히, 대학의 자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치인 것과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치와 함께 대학이사회로부터의 자치로 구분되고 있음을 이하부터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³¹⁾

25) 이시우,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고등교육법 총칙 개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한국공법학회, 2008. 10, 129면의 주4.

2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590면.

27) 노기호, 『교육권론』, 집문당, 2008, 318면;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Ⅲ』, 박영사(서울), 2013, 1061면.

2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432면; 여기에서 ‘대학의 자치’의 핵심적 내용으로 교수인사의 자치, 연구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자치, 학생자치, 시설관리의 자치, 특히 예산관리의 자치가 제시되고 있다. 성낙인, 『헌법학 논집』, 법문사, 2018, 1378면.

29) 노기호, 앞의 책, 319면.

30) 허영, 앞의 책, 434면.

31)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3, 488면.

나. 대학과 인권센터의 관계

대학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대상이 다양하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먼저, 인권침해 유형의 경우 인격권 침해, 학업권 침해, 연구권 침해, 신체적 침해, 근로권 침해, 재산권 침해, 교수권 침해, 기타 침해 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³²⁾ 인권침해 대상의 경우에도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학생, 교원, 직원 등 그 범위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학생의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있고, 교원의 경우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되고, 직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등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과 조교로 구성되는데, 산학협력단에서는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대학은 인권침해 유형과 대상의 적용범위가 다양하므로 충분한 재정과 인적자원을 갖추어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순기능이 가능하다.³³⁾ 이와 관련하여 인권보장기구가 내리는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과는 예산이 연계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³⁴⁾ 하지만 국공립대학 인권센터의 경우 학생처 소속의 학생상담센터(성희롱·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총장 및 부총장 직속기구인 인권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제40조와³⁵⁾ 「국립대학의 회

32) 세부 침해 형태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별표1] 인권침해 유형 참조바람.

33) 대학 내 인권센터의 업무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심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역량의 필요성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17면).

34) Centre for Human Right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rights, 1995, 116, at 11(김선기, 앞의 논문, 56면 주 25에서 재인용).

35) 「국고금 관리법」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 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

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³⁶⁾ 및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1-2 관직 지정 등³⁷⁾에 근거하여 대학 회계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분임계약관의 경우 학생처장, 분임지출관의 경우에는 학생지원과장으로 지정하게 되어 예산이 연계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목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제21대 국회 의안 중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다룬 안과 달리,³⁸⁾ 2018년 제20대 국회 의안에서 “학교는 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³⁹⁾ 아쉬운 점으로는 법률안에서 “원격대학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규정은 현 정세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약칭함)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원격대학처럼 비대면 교육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cyber) 공간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양한 각도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므로 대학 내 인권센터의 범위는 「고등

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전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 무의 대리 및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3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국립대학의 회계기관)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37)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1-2. 관직지정 등 ○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임명 및 관직 지정 ① 총장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대학회계 수입 및 지출사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지출관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38) ①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75, 2020.06.18.,

②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95, 2020.07.09.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727, 2018.03.28.

40) 예컨대,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음란물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사례로는 아시아경제, “대학생 죽음 내몬 ‘에타’ 악플…사이버 불링 피해, 해결책 없다”, 2020.11.04. <https://www.asiae.co.kr>

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인권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학교를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Ⅲ.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 검토

1. 과잉금지원칙 일반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⁴¹⁾ 기본권 제한의 기준으로서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해서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⁴²⁾ 과잉금지원칙은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제한원리’이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로 이해되고 있다.⁴³⁾ 즉, “입법자에게는 입법의 지침으로서, 행정청에게는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으로서, 국가행위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기관(헌법재판소나 법원)에게는 입법자나 행정청의 행위”를 대상으로 위헌성심사 기준이 적용된다.⁴⁴⁾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는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2020. 12. 31. 20:20 인출) 참조바람.

41) 여기에서 ‘본질적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는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0, 516면 이하.

42) 허영, 앞의 책, 156면.

4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464면.

44) 한수웅, 앞의 책, 465면.

4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965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⁴⁶⁾

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여부⁴⁷⁾

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학교는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이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 해서 그

46) 현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78-879면.

47)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목적과 수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 그 자체의 정당성을 묻는 ‘목적의 정당성’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 학계의 다수의견을 고려하여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수용, 앞의 책, 468면 주2; 정종섭, 앞의 책, 381면). 하지만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의 정당한 목적 이외에 기본권제한에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성낙인, 앞의 책, 966면).

48) 만약 본 법률안이 본회의부의안건으로 접수되어 본회의심의를 거쳐 정부이송 후 공포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부터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적다(현재 1997. 7. 16. 95헌가6 등, 판례집 9-2, 1면 이하).

국가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⁴⁹⁾ 그렇다면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대학의 재정 상황, 인력 현황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겠으나, 입법목적의 정당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육헌법에 준하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에도 합치하기 때문이다.⁵⁰⁾ 하지만 인권센터 설치의 의무화 대신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인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고지원 감면 또는 신입학 감축 조치 등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유도한다거나,⁵¹⁾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관할 지역 대학의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고,⁵²⁾ 준사법적인 인권전담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권보장기구를 마련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엄연히 존재한다.⁵³⁾ 따라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겠으나, 획일적으로 모든 대학에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서도 엄연히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것인바, 수단의 적정성을 위배하여 위헌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49) 현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78-379면.

50) 다만, 대학 내 인권센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모든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의 ‘학습자’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대학 내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1) 홍성수, 앞의 논문, 223면.

52) 홍성수, 앞의 논문, 220면.

53)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권담당관을 설치하였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여부

법률안이 제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없겠으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위하여 법이 의도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⁵⁴⁾ 즉,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한 입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 중에서 제한의 정도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⁵⁵⁾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고, 대학의 상황은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⁵⁶⁾ 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권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학교를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여 인권센터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1년 8억 1,300만원, 2025년 8억 5,800만원 등 5년 동안 총 41억 7,500만원(연평균 8억 3,5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다.⁵⁷⁾ 국립대학의 경우 현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인권센터의 재원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금으로 각 세목에 따라 지출하게 된다. 국립대학의 인권센터는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54) 현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56면.

55)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339면.

56)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은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휴학을 상생과 함께 학령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일보, “코로나 특수 상황 반영 못한 대학 3주기 평가…대학 ‘울상’”, 2020. 11. 26.

57)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020. 06. 17, 1면.

수 있겠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인권센터 운영비를 지원에서 배제하여 해당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건전성 등에 비추어 부담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어,⁵⁸⁾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적인 규정일 수 있다. 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는 국립대학에 국한하여 인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인권센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사립대학도 인권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합리성을 일탈치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 설치 의무의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바, 위헌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⁵⁹⁾

다. 법익의 균형성 여부

개정법률안은 “학교는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적용범위가 되고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법률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는 것임을 명시하여 공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까지 인권센터의 정당성을 우월하다고 하는

58) 사립대학 관련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업무 관련 회계인 것과 달리, 후자는 대학 운영 회계를 의미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열악하여 2015년부터 등록금수입 감소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2018, 5면, 107면.

59) 헌법재판소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등, 판례집 18-1하, 196면.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⁶⁰⁾ 특히 법익의 균형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법자가 실현하려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이라는 공익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인권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학교를 사립대학을 배제한 채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여 비용추계를 하며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상실된 것이다. 가령, 국공립대학에 국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전국 86%의 사립대학은 인권 보호라는 공익에 의하여 과도하게 사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인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법적 구제와 달리 비사법적 구제의 특성을 갖는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조사·구제 업무 등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각종 침해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구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적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15개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86%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안은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과 설치하게 될 대학(사립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인권보장기구로서 제 역할과 순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학교를 사립대학을 배제한 채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법익이 균형을 상실하게 될과 동시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며 대학의 자율성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바, 위헌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60) 현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60면.

IV. 결론

상술한 개정법률안에서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학교는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정당성 여부를 논증하기 위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었다.

첫째, 개정법률안이 수단의 적정성에 부합하려면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요구된다. 비사법적 구제의 특성을 갖는 대학 인권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대학부터 선별적으로 인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전국 대학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설치를 권고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고지원 감면 또는 신입학 감축 조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권센터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하려면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도 인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서 관할 지역 대학의 인권침해 등 사건을 처리 및 지원하도록 하거나,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된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하여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다.

셋째,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려면 대학 내 인권센터의 범위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모두 포섭하여야 한다. 특히,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을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비용추계를 전제하여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은 입법재량으로 존중될 수 있겠으나, 개정법률안의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은 수단의 적정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 및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전제하고 의무화하였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갈음한다.

(논문투고일: 2020.12.06, 심사의뢰일: 2020.12.23, 게재확정일: 2020.12.30)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020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2019.
-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020.
- 김선기, “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독립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김영중,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내 기구의 역할과 발전 방향”, 경찰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8.
-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 노기호, 교육권론, 집문당, 2008.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2018.
- 박선옥,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백승민, “한국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0.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 성낙인, 헌법학 논집, 법문사, 법문사, 2018.
-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3.
- 이시우,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고등교육법 총칙 개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한국공법학회, 2008.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0.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 중도일보, 코로나 특수 상황 반영 못한 대학 3주기 평가…대학 ‘올상’, 2020.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I], 박영사(서울), 201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Center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 Handbook i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1995.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헌재 1990. 9. 3. 89헌가95.

헌재 1992. 10. 1. 92헌마68.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7. 7. 16. 95헌가6.

헌재 1998. 5. 28. 96헌가5.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